

‘통신비’·‘무료 백신’ 평행선...추경 내일 본회의 처리 난항

민주, 통신비 원안·백신 대상 축소 고심... “추석 전 지급 위해 신속 처리” 여론 의식해 막판 절충 가능성도... ‘줄속·깎깎이’ 비판은 면키 어려울 듯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 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어 22일 본회의 처리에 난항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쟁점인 통신비 2만원 지원 및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선이 나온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0일 통화에서 “추석 전에 지원책 집행을 시작하려면 추경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통신비 지원 조정에 대한 내부 의견은 없고,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내에서 1100만명 백신 유료 접종분의 일부를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원 대상 선별부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 “백신 사업을 반영하려면 다른 예산을 깎아야 하는데, 마땅한 부분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통신비를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백신 약 300만명분 정도를 무료로 전환하는 절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통화에서 “통신비 지원에 편성된 1조원으로 국제 발령액을 줄일 수도 있고, 더 지원이 절실한 곳에 사용할 수도 있다”며 백신 무료접종 시행을 포함한 기존 입장 고수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과 특별아동돌봄 지원 대상의 확대 필요성도 내세우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단 예결위 간사들에게 협상을 일임한 상태지만,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원내대표간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22일 추경안이 처리돼도 정부 여당의 계획대로 추석 전 집행을 시작하기에 이미 촉박한 상태지만, 야당은 시간을 끌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점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여론의 비판이 불가피한 만큼 여야가 막판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에 현재로서는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이 경우 결국 비슷한 일정에 맞춘 심사가 불가피해 ‘줄속·깎깎이’란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초등학교 이하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 지원을 중고교생까지 확대할지, 개인택시 외에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할지도 최종 조율 대상이다. 집합금지업종 가운데 유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다시 포함할지도 관심거리다.

이 가운데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 지급과 돌봄비 지원 대상 확대는 여야 간에 긍정 검토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세균 총리 중대본 회의 참석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추미에 장관 관련 ‘입단속’ 주문

“사실 관계 분명히 가리되 과잉대응 자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에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 당내에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며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과 부풀리기 같은 정치 공세는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사실관계를 분명히 가리되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나훈남 대정부질문과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면서 추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대체로 하위

나 과장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세에 적절히 대응하고, 최근 당내 인사들이 지나친 옹호 표현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운 일에 대해서는 주의를 당부하며 ‘입단속’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추 장관이 장녀의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한 내역을 문제삼은 국민의힘 조순진 의원에 대해 “금도를 넣었다”, “국민의힘에는 더한 것이 없겠다”라는 반응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순진 의원은 2017년 1월 추 장관 아들의 육군훈련소 수료식날 논란 주

소와 식당에서 추 장관의 정치자금에 지출됐다는 주장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러나 전날 추 장관이 “근거 없는 세 치 혀”, “억지와 궤변” 등 강경한 표현을 섞어 가며 야당 의원들에게 맞선 데 대해서는 관측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논란 국면이 지속하면서 당 지도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도 부담이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총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수백 명의 검사·수사관을 동원하는 등 마치 군사 작전 하듯 검찰 역할을 충동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씨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고발 5개월이 지난 지금도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을 넘어 ‘총장님 식구 감싸기식 수사’라도 하는 듯하다”며 “부실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핵심 증거는 증발하고, 범죄 혐의점은 사라져버릴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법과 원칙을 아전인수식으로 적용한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권이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윤 총장의 취임사처럼 검찰권이 윤 총장 일가를 비호하는 데 쓰여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이상직도 제명? ...이번 주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논란과 관련, 이상직 의원 징계 문제에 대해 이르러면 급주 중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자녀 편법 증여, 대량해고 문제 등이 쟁점”이라며 “특히 노동 문제는 당 노동 정책과 너무 반하는 상황 이어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과) 같은 결과

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검찰단 회의를 잡히면 출석해 충실히 해명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국민의힘 박덕홍·조순진 의원의 각종 의혹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더 높이기 위해 이 의원 문제를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총장 장모도 조국처럼 수사하라”

민주, 검찰에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 같은 역량과 의지를 갖고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총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수백 명의 검사·수사관을 동원하는 등 마치 군사 작전 하듯 검찰 역할을 충동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씨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고발 5개월이 지난 지금도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을 넘어 ‘총장님 식구 감싸기식 수사’라도 하는 듯하다”며 “부실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핵심 증거는 증발하고, 범죄 혐의점은 사라져버릴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대변인은 “법과 원칙을 아전인수식으로 적용한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권이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윤 총장의 취임사처럼 검찰권이 윤 총장 일가를 비호하는 데 쓰여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양향자 “10년간 고소득자 7천760명 10조 소득 탈루”

지난 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0~2019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이 기간에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7760명은 총 21조2389억원의 소득을 신고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11조6925억원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소득 9조5464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됐다는 의미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0년 4018억원에서 2019년 1조1172억원으로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양 의원은 “공평과 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빈 “국가 R&D사업비 부당 집행 1367억 미환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당하게 집행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환수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20일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2011~2020년) 수행한 국가 R&D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여 환수 결정이 난 금액은 3243억원이며 이 가운데 1876억원을 환수하는데 그쳐 1367억원(43%)에 해당하는 국비를 환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환수금 미납건은 186건이며, 환수해야 할 금액은 512억원이다. 그러나 환수액은 31.1%에 해당하는 159억원에 그쳤다. 2015년에 71%였던 환수율이 2016년 69%, 2017년 54%로 매년 감소하다가 2018년 33%, 2019년 36%로 감소했다.

G.O. Auction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매매 물건

- 건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건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 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622.57㎡(18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3,574,778,000원(70%) 유찰 1회
- 공장** ▶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 18875.5㎡(5709.8평) 건물 : 6386.82㎡(1932평)
감정가 : 5,994,297,460원
최저가 : 4,196,008,000원(70%) 유찰 1회
- 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토지 : 10323.1㎡(3122.7평) 건물 : 1155.94㎡(349.7평)
감정가 : 1,892,743,280원
최저가 : 1,324,920,000원(70%) 유찰 1회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